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10월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

본 자료는 입법현황과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자체요약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목 차

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 1
1-2. 세종시, 7조 원 AI 데이터센터 유치 시동 ····· 2
1-3. 세종청년센터, 1인 가구 청년 위한 생활물품 무료 대여 ····· 2
1-4. 세종시, 신생아 난청 검사비·보청기 지원 ····· 3

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2-2. 통영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6
2-3.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7
2-4.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 ····· 8

3. 국회 입법 발의 현황

3-1~12. 지방자치 관련 국회 입법 발의 현황 ····· 10~15

4. 국내 정책 정보 및 이슈

4-1. 청주가 만든 '쓰레기 없는 포장'의 공식 ····· 17
4-2.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 18
4-3.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 ····· 19
4-4. 나눌수록 커지는 독서의 즐거움... 독서포인트로 청소년에게 책을 선물해요 ····· 20

5. 국외 정책 정보

5-1. 재난은 막을 수 없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다 ····· 22

01

세종시 관련 입법·정책 동향

1-1. 세종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100%, 최대 300만 원 한도

○ 세종시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시민에게 입원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에 거주하는 산모로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사유로 입원치료한 경우다. 지원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며, 이외 병실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 해당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분만일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해당 지원은 출산당 1회에 한해 제공되므로 임신 기간 중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 입원 건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모든 의료비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가 적정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출산, 모자건강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시사신문(https://www.csnnews.co.kr)

1-2. 세종시, 7조 원 AI 데이터센터 유치 시동

○ 세종시는 SK증권, 메테우스자산운용, 시드에이치와 총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 측이 제시한 사업 규모는 360MW급으로, 오는 2029년까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세종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기업의 부지와 전력, 용수 확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 측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시와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함께 지역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AI 산업 거점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향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력 공급 방안, 투자 실행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출처 : 금강경제(https://ggenews.kr)

1-3. 세종시 1인 가구 청년 위한 생활물품 무료대여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세종청년센터가 1인 가구 청년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사이사이 클라우드’ 물품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 대여 품목은 캠핑 장비와 여행용 캐리어 등 취미·여가용품을 비롯해 침구청소기 등 소형가전 등으로 구성됐다. 개별 구매 시 비용이나 보관 공간에 부담이 있는 물품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1인당 최대 2개 품목까지 대여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이다.

1-4. 세종시, 신생아 난청 검사비·보청기 지원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2회·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
-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에 보청기 1~2개 지급

○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침에 따르면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검사를 받고, 재검사 판정을 받으면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청으로 최종 진단되면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세종시보건소는 관내 신생아와 환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와 확진검사비, 난청 확진 환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검사를 마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 난청 확진검사비는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뒤 확진검사를 진행한 경우 최종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를 대상으로 양측성 또는 일측성 난청 기준에 따라 1~2개를 지급한다.

○ 다만 난청 확진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청기 구입비는 신청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와 보청기 지원 신청은 관련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난청 환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

타지역 자치법규 동향

2-1.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관내 기업의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체육선수의 경제활동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활동 보장과 장애인 체육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체육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자로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고용기업”이란 장애인 체육선수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충족하는 성남시 관내 소재 기업을 말한다.

○ **제5조(장애인 체육선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촉진 및 체육활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기업 내 장애인 체육선수의 훈련 및 체육활동 환경 개선 지원
2. 장애인 체육선수 훈련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3.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선수 발굴 및 기업 연계 지원

○ **제6조(고용기업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가 추진하는 보조금·지원금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활동 보장.
- 고용기업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활성화.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2. 통영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이유

- 통영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주요내용

- 생리용품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긴급한 상황에 지원이 가능.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2-3.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26년 경찰청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실운전자 중심의 반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 제고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 반납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없이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0.15.〉
3. "실운전 증빙자"란 고령운전자 중 70세가 된 이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일 전까지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0.15.〉

○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룡사랑 상품권 등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6.10.1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0.15.〉

1. 일반 반납자: 10만원 〈신설 2026.10.15.〉
2. 실운전 증빙자: 20만원 〈신설 2026.10.15.〉

주요내용

- 일반 반납자와 실운전 증빙자에 대한 정의가 세종시와 차이가 있음.
-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에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제6조)

우리 시 관련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4.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및 고부가 가치화 지원 조례

제·개정 이유

-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인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부담 저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 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 부산물”이란 농산물의 생산·수확·선별·저장·유통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생산 또는 제조·가공의 주된 목적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부가가치화”란 농식품 부산물을 기술개발·가공·제품화 등을 통해 새로운 원료로 활용하거나 제품으로 개발하여 경제적·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및 고부가가치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농식품 부산물의 발생 및 활용 현황
3.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여건 및 산업 수요
4. 농식품 부산물의 성분분석 및 안전·품질관리
5. 기술개발·실증 및 사업화 지원

주요내용

- 버려지는 부산물 활용을 조례를 통해 제도화함.

우리 시 관련 조례 : 없음.

03

국회입법 발의현황

대표발의자 : 이정헌 / 발의일 : '26.09.23 / 의안번호 : 2221561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자 : 김영진 / 발의일 : '26.09.30 / 의안번호 : 2221674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대표발의자 : 양부남 / 발의일 : '26.10.14 / 의안번호 : 2221885

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조사·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성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수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대표발의자 : 김준혁 / 발의일 : '26.10.06 / 의안번호 : 2221810

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교육복지,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설명·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대표발의자 : 주철현 / 발의일 : '26.09.22 / 의안번호 : 2221518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자 : 김태년 / 발의일 : '26.09.30 / 의안번호 : 2221703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대표발의자 : 이수진 / 발의일 : '26.09.21 / 의안번호 : 2221490

3-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센터에 이용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시간 증가,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접근성이 낮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자 : 김대식 / 발의일 : '26.09.22 / 의안번호 : 2221524

3-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음. 그런데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안정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위원장 / 발의일 : '26.09.29 / 의안번호 : 2221606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상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자 : 임호선 / 발의일 : '26.10.02 / 의안번호 : 2221769

3-1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2조·제4조·제4조의2·제12조).

대표발의자 : 문진석 / 발의일 : '26.10.13 / 의안번호 : 2221881

3-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표발의자 : 백승아 / 발의일 : '26.10.01 / 의안번호 : 2221739

3-1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자전거 이용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5항·제7항 신설 등).

04

국내정책 정보이슈

4-1. 청주가 만든 '쓰레기 없는 포장'의 공식

- 일회용품 줄이면 청주페이 2,000원
-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으로 안착

○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하면서 개인용기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일회용 포장 용기 감축에 나섰다. 참여 음식점에서 일회용기 대신 개인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건당 2,000원의 청주페이를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는 간단하여 시민이 참여 음식점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포장 주문을 한 뒤 음식을 담을 개인용기를 가져가면 된다. 음식점은 개인용기 사용 사실이 표기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민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앱 '새로고침'에 촬영해 등록하면 인증을 거쳐 하루 한 차례 청주페이가 지급된다.

○ 현재 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91개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은 지역화폐를 받고, 음식점은 포장 용기 구매 비용을 아끼며, 도시는 처리해야 할 일회용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 시행 이후 참여 음식점과 이용 시민이 제기한 운영 관련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은 현장의 큰 혼선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7년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약 200개 업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AI 이미지 인식 기술도 도입해 영수증 인증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실천할 동기를 제공한 청주시의 정책은 다른 지방정부가 참고할 만한 생활밀착형 자원순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2.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 2026년 10월 1일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자율·선제 시행 /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

· 대상: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 시행 사항: 일반팩·멸균팩을 '종이팩'으로 별도 분리배출

※ 종이팩은 폐지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출처 : 대구광역시 뉴스룸(https://info.daegu.go.kr)

4-3.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

- 영양군서 9월 28일 첫 운영... 이동장터 차량이 주 5회 방문
- 주민은 지역화폐로 물품 구매... 순창 등 9개 군도 순차 추진

○ 대구광역시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 이번 조치는 대구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대구에서만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마련된 저출생 극복 정책이다.

○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존 출산당 25회로 제한돼 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 대구시는 아이를 맞아들이기 위해 고통과 부담을 견뎌온 난임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돼도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난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대구 전체 출생아 1만 817명의 약 17.6%로,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 6명 중 1명에 달한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원 성과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이번 조치로 지원 한도 소진 때문에 시술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난임부부들의 시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4. 나눌수록 커지는 독서의 즐거움...독서 포인트로 청소년에게 책을 선물해요

- 경기도,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와 지역서점 청소년 기부 이벤트 연계 추진
- 도내 10개 지역서점 참여...나눔과 상생 가치 확산

○ 경기도는 도민들이 적립한 독서포인트를 책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플랫폼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와 지역서점의 '청소년에게 책 사줄게' 캠페인을 연계한다고 10일 밝혔다.

○ '천권으로(路) 독서포인트'는 경기도 대표 독서문화 프로젝트로 책 읽기와 도서 대출·구매, 독서일지 작성 등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지역서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 경기도는 도민들의 높은 참여로 올해 예정된 포인트 적립이 7월 조기 마감됐다며, 오는 12월 20일까지 적립한 포인트를 유의미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 연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에게 책 사줄게'는 도민이 지역서점에 책값을 기부하면 책이 필요한 청소년이 원하는 책을 직접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도는 지역서점과 연계해 독서포인트로 도서 구매뿐 아니라 기부도 할 수 있게 했다.

○ 현재 캠페인에는 ▲광주시 '서행구간' ▲안산시 '수암산책' ▲의왕시 '책방 새와우물' ▲용인시 '용인문고' ▲구리시 '춘가책상점' ▲수원시 '에듀문고' ▲포천시 '운천서점' ▲고양시 '플라뇌즈' ▲화성시 '모퉁이 책방' ▲남양주시 '도이책방' 총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참여 서점에 방문해 독서포인트가 적립된 지역화폐 카드로 기부 금액을 선결제하면 된다.

05

국외정책 정보이슈

5-1. 재난은 막을 수 없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다

- 덴마크, 평소에는 공원 폭우가 오면 거대한 물그릇

○ 2011년 코펜하겐이 짧은 시간 동안 약 150mm의 비가 쏟아졌다. 지하실과 기차역, 간선도로가 잠겼고, 코펜하겐시는 피해액을 60억 덴마크크로네 이상으로 집계했다. 도시 전체의 3분의 1만 대상으로 하려던 폭우 대책은 이 사건 이후 도시 전역 계획으로 확대됐다.

○ 코펜하겐은 2012년 '클라우드버스트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시의회는 2015년 12월 향후 약 20년간 추진할 300개의 지상 적응 사업 목록을 승인했다. 원칙은 '가능하면 물을 지상으로, 꼭 필요한 곳만 지하로'다. 도로는 폭우시 물길이 되고, 공원과 광장은 일시 저류지가 된다.

○ 대표 사례가 엔가베 공원이다. 1920년대에 조성된 3만5,000㎡ 규모의 역사 공원을 리모델링해 2019년 12월 '기후공원'으로 재개장했다. 평소에는 놀이터, 운동장, 정원이지만, 폭우 때는 최대 2만2,600㎥의 빗물을 가둔다. 공원 가장자리를 두른 높이 최대 1m의 둑은 평소 벤치 역할을 하다가 폭우 시 자동 수문이 닫히며 공원 전체가 거대한 물그릇이 된다. 평상시 빗물은 재이용해 연간 최소 100만 리터의 수돗물을 절약한다.

○ **한국 지방정부에 주는 시사점**

: 학교 운동장,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광장을 재난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다. 하나의 예산으로 시민 공간과 안전시설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코펜하겐 사례의 핵심은 '방재 사업을 도시재생의 언어로 설계하라'는 것이다. 주민이 매일 쓰는 공간이어야 유지관리 예산도, 정치적 지지도 확보된다.

- **단체장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 도시의 공원과 광장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회